

‘해외 물류거점’ 40개로 확충 수출입 공급망 안정화 나선다

해수부, 해외 공급망 안정화 확대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 추진
전략 화물 해외 터미널 투자 강화
친환경·스마트 항만으로 현대화
2030년까지 물류 경쟁력 선도

정부가 4조5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공공지원 물류센터를 현재의 9개소에서 40개소로 늘린다. 불안정한 국제 공급망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수출입 물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개최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개사 육성 방침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드 등의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해외 물류 거점 국가는 11개 국가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교역량, 해외 직접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등이 지원하는 ‘공공



지원 물류 기반시설’을 2030년까지 40곳(현재 9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정부와 국적 선사,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국적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컨 터미널 확보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투자처 발굴과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해 해외 터미널의 지분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발판으로 향후 터미널 운영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곡물 등 전략 화물의 경우 해외 벌크 터미널 확보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처를 발굴하면, 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 등이 공동사업자(컨소시엄)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1조 원), 항만 스마트화 펀

드(5000억 원) 등을 통해 국내 노후 터미널의 현대화도 지원해 에너지, 곡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진출 검토 단계에서는 물류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시장 정보를 공공부문이 우선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로 제공하는 현지 타당성 조사·컨설팅 지원 한도도 현행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 분석의 정밀성을 높인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불확실한 물류 환경에 있어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입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전, 제주 100MW 韓 최대 해상풍력 준공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한림서
연간 6만5000가구 전력 공급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제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전은 지난 15일 웨이브제주 컨벤션홀에서 100MW급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이 주도해 설립한 제주한림해상풍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연간 234GWh의 전력을 생산해 제주도민 약 6만5000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를 공급한다.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한전이 주도하고 전력그룹사가 개발·건설·운영 전 과정에 참여해 대규모 해상풍력을 적기에 건설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목표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

화, 바람연금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특히 국내 건설사와 기업들이 참여해 100% 국산 기자재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해상풍력은 발전산업을 넘어 에너지 신기술·신산업으로 확장되는 분야로, 향후 해상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345kV 해상변전소 핵심 기자재 등 연관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제주한림 사업은 해상풍력 최초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제도’를 도입했다. 한림읍 수원리 등 인근 3개 마을 주민 10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받는 구조로, 지역상생과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서철수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계획된 예산과 일정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공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홍문표, 정부에 짝퉁 K-푸드 단속 촉구 (aT 사장)

해외지사 주도 시식 확대 제안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일본산 K-푸드 모조·유사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 사장은 16일 세종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라면·김밥 등의 이른바 ‘짝퉁 K-푸드’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K-푸드 가운데 수출이 잘 되는 품목은 라면, 김치, 김밥, 떡볶이 등”이라며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서 짝퉁이 범람하고 있다. 국가가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수출 상위 10위 품목이 중국·일본산에 밀려 침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사장은 각국에 K-푸드 홍보 코너를 만들자고 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진짜 우리 농식품을 시식하게 해 일본·중국산과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또 “인위적으로라도 공공기관(해외지사)을 통해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 손발을 다해 한국 농산물 홍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국가 인증제’를 도입하는 식의 특수한 방법이라도 써야 할 만큼 정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실태를 보고하고 공유했다며, 대통령실이 농식품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중국·일본산 가격이 우리 상품 대비 3분의 1 내지 2분의 1 수준”이라며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진짜 K-푸드의 수출에 큰 타격·위기상황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성평등·상생 가치 실현 김장나눔 행사

결혼이민여성·북한이탈주민 참여

농협경제지주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와 함께 ‘성평등 및 상생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남 함평 대동면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결혼이민여성 및 북한이탈주민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농협 관계자는 “함께 김장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게 나눔으로써 성평등 및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민숙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은 “전국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김장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동참하고자 농가주부모임도 김장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가 성평등과 상

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연합회는 여성 농업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에 힘쓰고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민여성 농업 교육 등) ▲NH농촌현장봉사단 활동 참여 ▲밀반찬 및 도시락 나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 행사에는 박민숙 연합회장과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이광일 전남 본부장, 이상의 함평군수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교육부

AI 감사시스템 도입

감사 처분 신뢰도·일관성 강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를 도입한다. 감사 처분 전 과정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처분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이런 내용의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사업을 16일 공고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정과제 99-1. 초·중·고 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교육 분야 감사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AI 감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ISP를 수립,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뒤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감사시스템에는 ▲감사보고서 초안 생성 ▲감사업무의 영역별로 특화된 심층 질의·답변 ▲관련 사건 분석과 행정소송 결과 예측 ▲비문 교정과 띄어쓰기 등의 맞춤법 교정 기능을 탑재해 감사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인다. 정부는 앞으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최종 기능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육아휴직 복직 후 1개월까지 지원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구직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으로 인상
주 4.5일제 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방식도 개선돼, 현재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뒤 50%를 지급하던 것을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 지급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급여 산정 기준금액 상한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의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60% 지원)은 150만원에서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시스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위라벨+4.5 프로젝트)과 관련해, 사업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